

[기고]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안전관리 혁신

뉴스경남 | 승인 2026.04.02 14:50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 박찬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 박찬희 기고

공공 발주 건설 현장에서 완성되는 안전의 책임

공공 건설현장은 단순히 시설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고, 지역의 삶과 직결되며,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전제돼야 할 공적 영역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는 개별 현장을 넘어 사회 전반에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갖는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이러한 인식 아래, 그간 운영해 온 건설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공사와 시공사, 현장근로자 모두가 공사 전 과정에서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안전관리에 임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긴장 강화 기반 위에서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고 이전의 예방, 그리고 현장 중심 관리로의 전환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다

최근 몇 년간 경남 관내 13개 지사의 발주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진다. 이것이 개별 현장의 관리 소홀 때문인지, 아니면 안전관리 체계 자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인지에 대한 물음이다.

실제로 많은 사고는 고위험 공종, 촉박한 공정, 형식적인 점검이 겹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이는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다.

공사 초기부터 시작되는 사전 예방 관리

경남지역본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사전 예방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형식적인 점검이나 사후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공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선 신규 착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착수전 안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본부 안전관리 조직이 참여해 현장의 안전관리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법적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주요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가 함께 참여해 안전관리 계획과 작업 절차, 위험요인 대응 방안을 사전점검하고 보완한다. 또한 컨설팅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공정 착수를 제한하는 등 공사 초기부터 안전관리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정기 점검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고 없는 불시점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고위험 공종, 사고 발생 이력, TBM 운영 상태 등 안전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점검 대상 현장을 선정하고, 불시에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건설기계 작업, 2m 이상 굴착, 고소작업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종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작업 전 안전조치 여부와 TBM 운영 실태, 현장 작업 통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는 서류 확인 중심의 점검을 넘어 실제 작업 현장에서 안전 기준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다.

경남지역본부는 점검 이후에도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점검?조치?환류의 선순환 관리 체계를 통해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작업중지와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개선 결과를 관리체계에 반영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기술은 감시가 아니라 예방을 위한 수단이다

안전관리는 더 이상 사람의 눈과 경험에만 의존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리 방식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경남지역본부는 인력 중심 안전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경남 관내 발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사업장 비율을 지난해 40%에서 올해는 9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AI CCTV, 스마트 건설기계 접근 경보 및 작업위험 경보 장치, 근로자 스마트 안전장비 등은 사고 발생 이후 책임을 가리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사람이 위험에 노출되기 전에 개입하기 위한 예방 도구다. 공공부문이 이러한 기술을 먼저 표준으로 정착시킬 때, 민간 현장으로의 확산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안전은 제도가 아니라 문화다

아무리 제도가 정교하더라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에 경남지역본부는 점검과 처벌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참여와 동기를 유도하는 방식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우수 사업장과 무사고 현장에 대한 인센티브, 아차사고 발굴과 개선 제안 포상, '안전하십니까' 캠페인과 같은 참여형 활동은 안전을 비용이 아닌 가치로 인식하게 만드는 장치다. 공공기관이 안전을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주체가 아니라, 현장과 함께 만들어 가는 파트너가 될 때 안전은 문화로 자리 잡는다.

공공기관이 먼저 책임을 보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책무다. 특히 발주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넘어, 현장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할 책임이 있다.

경남지역본부의 안전관리 체계 개선은 하나의 완성된 답이라기보다, 공공기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천적 과정이다. 기술로 위험을 관리하고, 제도로 책임을 명확히 하며, 안전 문화를 현장에 뿌리내리는 일은 공공기관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시대적 책무다.

경남지역본부는 발주자로서의 책임을 현장 끝까지 이어가며, 선언이나 일회성 대책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반복되는 실천과 점검을 통해 개선된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 전반에 실효성 있게 정착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현장에서 시작된 노력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설안전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



뉴스경남 webmaster@newsgn.com

저작권자 © 뉴스경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